

# 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경제전략 및 산업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

---

**박태호**

[thbark@snu.ac.kr](mailto:thbark@snu.ac.kr)

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
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 
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

2024. 11. 20

# 목차

---

- I. 서론
- II.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통상정책
- III. 트럼프 대통령 2기 외교안보정책과 산업통상정책 전망
- IV.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
- V. 우리의 대응방향
- VI. 맺음말

# I. 서론

## 1. 트럼프 대통령 예상 밖 압도적 승리

- 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이 승리 요인

## 2. 미 의회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

- 상하원에서는 이미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확정
- 트럼프 대통령 2기 강력한 정책추진의 정치환경 마련

## 3. 세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에 직면

- 분야간 상호의존성 심화로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음
- 기존 세계질서/다자체제, 나아가 미국도 복합적 위기 해결 능력 없음
- 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질서 불확실성 더 증폭시킬 가능성

# II.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 산업통상정책

## 1. 트럼프 1기 행정부 산업통상정책

### 1) 산업정책

- "Make America Great Again" 기치아래 제조업 부활
- 전 정부 에너지, 기후변화, 환경 관련 규제완화 및 석유/가스 생산확대

### 2) 통상정책

- 취임 직후 TPP 가입 철회 및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
- 「무역법」201조와 301조에 근거하여 대대적인 관세 부과
- 「무역확장법」232조에 근거하여 철강/알루미늄에 각각 25%, 10% 관세부과
- 「무역법」301조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부과
- 2020년 1월 중국과「1단계 무역합의(Phase One Trade Deal)」체결  
(2년간 미국의 공산품, 농산물, 서비스, 에너지 등 7,000억 달러 규모 추가 구매 약속)
- 「FIRRMA(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)」법안을 도입
- 「수출통제개혁법(Export Control Reform Act)」의회 통과
- 2019년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 재협상한 USMCA, 개정 한미 FTA 발효

# II.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 산업통상정책

## 1. 바이든 행정부 산업통상정책

### 1) 특정 산업 지원하는 '산업정책' 적극 추진

-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: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기업 보조금
- 2023년 에너지부(DOE):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기업 최대 35억 달러 지원
- 2022년 반도체/과학법(CHIPS and Science Act):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 대상 약 500억 달러 지원

### 2) 통상정책

- 「무역법」201조/301조와 「무역확장법」232조 등에 근거한 트럼프 1기 관세정책 계승
- 2023년 8월 해외투자심사제도 신설, 첨단기술분야 미국 자본의 해외투자 제한
- 2024년 9월 핵심 첨단기술 수출통제 대상으로 포함
- WTO 상소기구 정상화 추진 의사 있었으나 조치 취하지 않음
- 2022년 IPEF 출범시킴

# III. 트럼프 2기 외교안보정책과 산업통상정책 전망

## 1) 외교안보정책: 국익 중심 '미국 우선주의'

### 가) 힘을 통한 거래기반 국제관계: 일방주의/비개입주의 원칙

- 실리에 기반한 거래방식 도입: 적대세력 및 비민주주의 국가 협상 가능
- 전략지역에서의 패권도전국가 견제
- 동맹관계 재조정 및 방위비 증액 요구 → 무임승차 불가
- 국제분쟁 연루 최소화,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및 NATO 탈퇴

### 나) 지역별 외교 정책

- ① 이스라엘/중동: 강력한 친 이스라엘 정책 추진, 이란 위협 대응
- ② 러시아/우크라이나: 러시아와의 협상 통한 전쟁 종식,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
- ③ 대 중국: 60% 관세부과, 전면적인 디커플링 시도 등 전방위적 압박
- ④ 한반도: 방위비 분담금 증액(연 100억 달러, 현재의 9배 수준 요구), 주한 미군 감축, 한미연합 훈련 축소, 한미일 협력 약화, 한국/일본 자체 핵무기 개발 허용, 북미정상회담 통한 북한 위협 관리 등

# III. 트럼프 2기 외교안보정책과 산업통상정책 전망

## 2) 산업정책

- “Make America Great Again” 구호 하에 제조업 강국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
- 해외에서의 아웃소싱 중단하고 re-shoring 통한 미국내 투자 유인
- 철강, 자동차, 방위, 에너지, AI 등 핵심산업 대상 기업친화정책(법인세 인하: 35%-21%(트럼프 1기) → 15%, 2026년 개정 가능) 추진
-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조정(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IRA 폐지 가능성 상존)
- 석유/가스 생산 확대, 미국을 에너지 자립/수출 강국으로 발전
- 암호화폐 산업을 디지털 혁신 산업으로 수용하고 정부규제 완화

# III. 트럼프 2기 외교안보정책과 산업통상정책 전망

## 3) 통상정책

### 가. 관세 및 비관세 조치

- 10%~20%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, 중국 상품에는 60% 관세 부과: 세수감소로부터 오는 재정적자를 관세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
- 「상호무역법(Trump Reciprocal Trade Act)」: 관세 및 비관세조치 관련 대통령의 권한 확대 → 트럼프 1기 때도 추진, 의회통과 못함
- 트럼프 대통령 2기 때 의회통과 가능
- 「무역확장법」232조(국가안보) 근거로 승용차에 대해 관세 인상 가능성

### 나. 무역구제조치

- 제조업 보호 위해 반덤핑, 상계관세, 세이프가드 조치 적극 활용
- 알루미늄 제품, 태양광 패널, 세탁기 등이 대상
- 특히 중국 보조금 수혜 및 과잉생산 제품의 대미 수출 저지
- 이러한 중국산 제품이 제 3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 방지



# III. 트럼프 2기 외교안보정책과 산업통상정책 전망

## 다. 바이 아메리카 정책

-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 미국산 상품을 우선 구매 강제

## 라. 경제안보 정책

- 외국인투자심사(CFIUS) 강화: 중국 및 중국과 관련이 깊은 기업에 엄격히 적용
- 중국, 이란, 러시아 등 대상으로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강화
- 중국 첨단기술 분야로의 미국 자본 투자 제한, 기술 유출도 수출통제대상

## 마. 기존 FTA에 대한 정책

- USMCA 원산지규정 개정: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 대미 수출 통제
- 한-미 FTA 재개정 요구 가능성

# IV.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

## 1. 개요

### ▪ 우리 산업 및 통상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

-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(2023년 450억달러)를 이유로 압박 가할 수 있음
- 보편관세 부과시 한-미FTA 혜택 축소 가능성
- 중국 상품 60% 관세 등 수입규제 강화 → 중국 및 베트남 진출한 우리 기업에 부정적 영향, 반사이익 보는 분야도 있을 수 있음
- 수출통제강화로 우리 기업의 대외수출에 부정적 영향
-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 대상 보조금/세액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
- USMCA/한-미 FTA 개정 → 미국/캐나다/멕시코 투자 우리 기업 불확실성 제고
- 첨단기술분야에서 대중국 견제 강화가 우리 기업에 반사이익 줄 가능성

# IV.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

## 2. 산업별 영향

### 1) 반도체

-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에 우리 기업 동참 요구 전망
- CHIPS and Science Act하에서 약속된 보조금지원 폐지/축소 우려
- 반도체 중요성 감안 IRA 만큼 리스크가 크지 않을 전망

### 2) 전기차/배터리

-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 정책 폐기/축소 → 재생에너지 수요 감축 예상
- IRA 폐기 또는 IRA 개정 → 전기차 보조금 축소, 이차전지, 전기자동차, 태양광 패널 투자기업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(AMPC) 폐지 내지 축소 가능성
- 고용효과 감안 → IRA의 폐지보다 축소 및 '해외우려집단(FEOC)' 규정 강화

# IV.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

## 3) 자동차

-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로 한국산 자동차 수입 축소 시도
- 한-미FTA의 재개정 압박, 「무역확장법」 제232조 적용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 부과, 자발적 수출제한조치(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도입 대일 자동차 수출규제방식: 수출자율쿼터) 압력 가능성

## 4) 철강

-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미 철강 수출쿼터설정 합의
- 기존 쿼터량 축소 요구 가능성
- 원산지규정 강화(중국원자재 사용금지 등)와 반덤핑,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가능성

# V. 우리의 대응 방향

## 1) 정부의 대응방향

### 가. 대미 무역적자 해소 방안 마련

- 2023년 대미 무역흑자 문제 삼을 수 있음
- 미국으로부터 원유 및 가스 등 에너지 수입 늘어 무역불균형 해소방안 마련

### 나. 보편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

- 모든 수입품에 10-20% 수준의 보편관세 부과 실시(인플레이션 유발 → 이자율상승 ← 저 달러 정책과 충돌 가능성) → 장기간 부과 어려울 것임
- 의회 승인 필요하나 공화당 주도 의회 승인 가능
- WTO 모든 회원과의 약속 위배(WTO 제소 가능하나 효과 없음)
- 한-미 FTA 협정의 상호관세 철폐원칙에도 위배
- 보편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양자협상을 통해 예외조치 적용 노력

# V. 우리의 대응 방향

## 다. 「상호무역법」 제정에 대한 대응

- 「상호무역법」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임
- 미 의회 상하원 모두 다수당인 공화당이 법 통과시킬 수 있음
- 불공정한 무역관계 시정 요구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 대폭 강화
- 우리나라가 「상호무역법」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

## 라.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 무효화에 대한 대응

- IRA 폐기/혜택 축소, 반도체법상 보조금 및 세금공제 혜택 축소 전망
- 우리 배터리 기업의 기술협력,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국익에 기여 설득
-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미국의 역내 반도체 생산, 고용창출, 대중국 견제 협력에 결정적인 기여 강조

# V. 우리의 대응 방향

## 마. 한·미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대응

-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로 자본재 및 부품 등의 수출 증가 설명
- 미국 중소기업 상품, 농산물, 서비스 대 한국 수출이 한-미 FTA를 통해 증가
- 한-미 FTA 이미 한 번 개정
- 한-미 FTA 지속적 유지·활용 중요성 강조

## 바. 통합대응팀 구축

- 모든 관련 부처를 포함한 통합대응팀 구축
- 분야별 리스크/기회 요인 분석 통해 포괄적인 대응전략 마련
- 긴밀한 민관 소통체제 운영 필요
- 미 연방정부, 의회, 우리 기업 투자 지역 도지사, 상하원 의원 설득 및 활용

# V. 우리의 대응 방향

## 2)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

### 가.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시스템 구축

- 지정학적 리스크 평가하고 주요 무역 및 투자 대상국가(미국, EU 중국 등)의 정책과 입법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

### 나. 최고경영자 중심 글로벌 전략 컨트롤 타워 구축

- 최고경영자가 직접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글로벌 전략 컨트롤 타워 구축
- 이를 뒷받침하는 상설 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

### 다. 미국의 IRA 및 CHIPS and Science Act 변경에 따른 대책 마련

- 미국의 IRA 및 CHIPS and Science Act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 사업 및 투자계획 수정 등 대응책 마련



# VI. 맺음말

## 1) 시사점

- 친 기업정책, 환경/에너지 규제 완화정책으로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
- 각종 관세를 무기 삼아 초기에 대규모 무역수지적자 축소 시도
- 고율관세, 수출 및 기술 통제, 중국기업 미국 투자 통제, 미국기업 중국 투자 통제, 원산지규범 강화 등을 통해 전방위적 중국압박 → 조기 대 타협 시도
- 석유 및 가스 생산확대 통해 에너지 수출 추진
- 조기 정책추진 완성 노력, 인플레이션 유발 우려로 고율관세 정책 유지 어려움

## 2) 우리 경제에의 기회

- 우리 경제 차별적 요소 없어 사전 대비로 어려움 극복 가능
-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기업 제조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제조업 활성화 프로젝트에 참여 → 추가 투자 및 첨단 소부장 제품 대미수출 증대
- 첨단기술 분야에 미국 기술기업 한국유치 및 공동연구 추진
- 세계적 건조능력 갖춘 우리 조선업의 선박 수주 및 선박관련 서비스 수출

# VI. 맺음말

## 3) 정부 과제

-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외국인투자 유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대폭 완화
-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CPTPP 조기 가입으로 수출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 추진
- 선진중견국가 목소리 확대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제고 → 캐나다, 호주 등 선진중견국가와의 협력 추진 및 G7 Plus 논의 참여 및 G7 가입 추진

**감사합니다**

---